

【논문】

1936년 鮮滿 首腦의 「圖們會談」과 「鮮滿一如」*

정안기**

┆ 차례 ┆

1. 머리말
2. 「圖們會談」과 「鮮滿一如」
3. 「帝國」차원의 다양한 반응
4. 맺은말

국문초록

1936년 10월 선만 수뇌는 만주국 통화성 圖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같은 회담에서 南滿總督은 鮮滿一如를 제창하였다. 도문회담에 임하는 만주국의 입장은 압록강 개발과 관련한 조선측의 협력이었고, 조선측은 치외법권 철폐에 따른 재만조선인의 지위 개선에 대한 만주국측의 정치적 협력이었다. 결국, 도문회담에서 선만 양측은 당시 만주국이 당면한 경제문제와 식민통치의 안정화를 추구하는 조선측의 정치적 현안을 서로 맞교환하는 식민정부 차원의 정치경제적 빅딜(big-deal)이었다. 이는 도문회담이 만주국 건국 이래 대립과 갈등으로부터 상호의존과 협력지향의 선만관계로의 전환임과 동시에 이러한 관계변화를 표상하는 선만일여 슬로건이 최초로 등장한 역사적인 회담이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선만일여 슬로건은 공허한 메아리 혹은 구호에 그쳤던 것이 아니라 당시 이른바 ‘선만일여의 금자탑’으로도 膾炙되었던 압록강 수력개발(수풍댐 건설) 등 1930년대 후반 선만협력

* 본 연구의 기획 과정에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시고, 학회 발표에서도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연세대학교 사학과 임성모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을 지지하는 이데올로기적 기제였다. 결국, 도문회담에서 처음 등장한 선만일여 슬로건은 조선총독부가 추구하는 내선일체와 만주국이 표방하는 민족협화 이데올로기의 상극 해소와 함께 새로운 제국질서를 지향하는 또 다른 식민통치 이데올로기였다. 그러나 종래 연구는 1930년대 선만일여 슬로건을 언급하면서도 누가, 언제, 어디에서, 왜 선만일여 슬로건을 제창하였는지 혹은 도문회담 그 자체에 대한 연구 관심도 불충분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1932년 만주국 건국 이래 갈등과 대립으로부터 상호의존과 협력지향의 선만관계로의 전환점이었고, 동시에 선만일여 슬로건에 입각해서 새로운 제국질서를 모색하고자 했던 선만 수뇌의 도문회담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 도문회담, 선만일여, 내선일체, 민족협화, 南총독, 재만조선인

1. 머리말

만주국 건국 이래 선만 수뇌는 총 3차례에 걸쳐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1936년 10월 圖們 회담(南조선총독과 植田관동군사령관)을 시작으로 1941년 4월 新京 회담(南조선총독과 梅津관동군사령관)¹⁾ 그리고 1943년 7월 新京 회담(小磯총독과 梅津관동군사령관²⁾)이다. 이들 수뇌 회담의 목적은 선만 양측이 당면한 정치경제적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과 선만일여 슬로건에 입각한 긴밀한 협력관계의 구축이었다. 그 가운데 본 연구는 1936년 10월 선만 수뇌의 ‘도문 회담’에 주목하고자 한다. 결론을 앞서 말하면, 도문회담은 만주국 건국 이후 갈등과 대립관계로부터 상호의존과 협력지향의 선만관계로의 전환임과 동시에 이러한 제국질서를 표상하는 선만일여 슬로건이 최초로 등장한 역사적인 회담이었다. 나아가, 선만일여 슬로건은 공허한 메아리 혹은 구호에 그쳤던 것이 아니라 당시 이른바 ‘선만일여의 금자탑’으로 膾炙되었던 압록강 수력개발 등 1930년대 후반 선만협력을 지지하고 구속하는 이데올로기적 기제로 작용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한 종래 선만관계사 연구는 다음과

1) 滿洲帝國協和會中央本部調査部編, 1943, 『國內に於ける鮮系在國民實態』.

2) 朝鮮總督府, 1943.8, 『朝鮮』.

같다.

먼저, 田中은 재만조선인의 교육문제, 국적법, 병역문제 등 ‘내선일체’를 추구하는 조선총독부와 ‘민족협화’를 국시로 하는 만주국과의 이데올로기 상극에 주목해서 일제 식민통치의 구조적인 모순과 파열의 논리를 제시하였다.³⁾ 田中の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수도 있는 선만 양측의 이데올로기 상극이 재만조선인의 관할권 문제를 둘러싼 식민정부 차원의 정치적 대립으로 이어지면서 쌍방의 정책을 구속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임성모는 南총독이 제창한 ‘선만일여’ 슬로건의 등장과 1937년 4월 당시 張慶惠 만주국 국무총리의 경성방문에 주목해서 만주국 건국 이후 제국통치의 위계질서 변동과 그 와중에서 조선이 차지하는 정치경제적 위상의 변화에 주목하였다.⁴⁾ 즉,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일제의 만주국 편향이라는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재조일본인 사회는 정치경제적 소외의 위기의식에 휩싸였고, 이를 타개하고자 등장한 것이 바로 선만일여 슬로건이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송규진은 滿鮮史觀에 입각한 선만일여론의 등장 배경과 선만협력의 역사적 과정 그리고 그 작동 논리에 주목하였다. 즉, 일제는 만주국 성립 이전부터 만주 지배를 구상하는 다양한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그 가운데 선만일여론은 1930년대 대륙침략을 위한 엔블력의 확대 재편과 제국경제권 구축이라는 제국주의 침략야욕을 드러내는 또 다른 슬로건에 불과했다는 것이다.⁵⁾

이상, 종래 연구는 1930년대 선만관계의 구조적인 대립가설 혹은 일제의 대륙침략 야욕을 드러내는 협력가설로 구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도문회담과 선만일여 슬로건에 주목하면서도 누가, 언제, 어디에서, 왜 선만일여를 제창하였는지에 대한 연구 관심은 지극히 불충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32년 3월 만주국 건국 이후 갈등과 대립으로부터 협력지향의 선만관계로의 역사적 전환점이자, 선만일여 슬로건이 제국통치의

3) 田中隆一, 2007, 『滿州國と日本の帝國支配』, 有志社.

4) 임성모, 2009, 「중일전쟁 전야 만주국·조선 관계사의 소묘: ‘日滿一體’와 ‘鮮滿一如’의 갈등」, 『역사학보』201.

5) 송규진, 2009, 「일제하 ‘鮮滿관계’와 ‘鮮滿一如론」, 『한국사연구』146.

새로운 스킴으로 등장한 도문회담에 주목하고자 한다. 나아가, 도문회담과 선만일여 슬로건에 대한 제국 차원의 다양한 반응을 帝國史 문맥에서 새롭게 해석해서 그 역사적 의의를 분명하고자 한다. 이는 1930년대 선만관계를 만주국 편향이라는 ‘관계의 시혜성’이 아니라 통상적인 국제관계가 특징으로 하는 ‘관계의 호혜성’에 입각한 선만관계 혹은 제국질서의 변화에 주목한 정치경제사적 연구 관심이다.

2. 「圖們會談」과 「鮮滿一如」

1936년 10월 29일 선만 수뇌는 당시 압록강과 두만강의 가교 건설과 압록강의 수력개발 그리고 만주국의 치외법권 철폐에 따른 재조·재만조선인 사회가 동요하는 와중에서 ‘도문회담’을 개최하였다. 종래 연구에서 도문회담은 재조일본인 사회의 위기의식을 반영하는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로 간주하였다.⁶⁾ 이하에서는 도문회담의 개최 경위와 내용 그리고 선만일여 슬로건의 처음으로 등장했던 저간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자.

1) 圖們會談의 개최 경위와 배경

1936년 10월 20일부터 24일에 걸쳐 조선은 물론이고 일본과 만주국의 정

6) 임성모는 같은 논문에서 ‘투먼회담에 의해 추진된 구체적인 시책들’이라는 표2를 게재하였다. 그 내용은 도문회담에서 논의했다는 국제교량 가설을 비롯한 14개 시책이었다. 그러나 이들 14개 시책들은 과연 투먼회담에서 실제로 논의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제시한 표2의 원자료는 1937년 4월 22일자 경성일보 기사이다. 즉, 1937년 4월 21일부터 만주국 국무총리 張慶惠의 경성방문에 즈음해서 당시 선만관계의 정치경제적 현안을 소개한 기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14개 시책 가운데 국제교량 건설은 1936년 12월, 조선인의 만주이민과 관련한 鮮滿拓植(주)은 1936년 8월에 이미 설립되었음을 고려하면, 이는 도문회담의 성과라기보다는 경성일보가 만주국 성립 이후 선만간의 중요 현안을 나열해서 張총리의 경성방문이 갖는 정치경제적 의의를 어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문제는 도문회담 그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불가결하다고 하겠다. 임성모, 2009, 「중일전쟁 전야 만주국·조선 관계사의 소묘: ‘日滿一體’와 ‘鮮滿一如’의 갈등」 『역사학보』201, 183~184쪽.

재계 인사 76명이 참석한 대규모 조선산업경제조사회)를 성황리에 마친 南 총독은 26일 오후 3시 50분 三橋경무국장, 鹽原비서관, 相川외사과장, 藤村 어용계, 田中통역관을 대동하고 경성역을 출발해서 취임 이래 최초의 지방 순시(이른바 北鮮視察)에 나섰다. 南 일행의 북선 시찰은 10월 27일 오전 아침 古茂山역 도착 이후 청진, 나진, 웅기, 회령 등 각지를 차례로 순시하고, 11월 2일 오전 7시 20분 경성역으로 귀임하는 일정이었다. 그러나 南총독은 당초 예정과는 달리 시찰 도중이었던 10월 29일 오전 8시 돌연 웅기를 출발해서 만주국 통화성 도문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만주국측의 당사자였던 植田관동군사령관의 動靜과 관련해 당시 關東局 司政部長이었던 武部六藏은 자신의 일기에서 10월 26일 “(植田관동군사령관이) 아침 비행기로 東滿州 순시를 위해 출발했지만, 실제 목적은 오는 29일 圖們에서 南조선총독과 회합하는 것이다. 29일에는 關東國의 三浦, 大使館의 山本, 關東軍의 竹下를 동반할 것”⁸⁾이라 지적하였다. 즉, 植田관동군사령관은 간도성 시찰을 명분으로 통화성 도문으로 이동하였다.

1936년 10월 29일 오후 4시 통화성 도문 소재 일본영사관 분관에 도착한 南총독은 뒤이어 도착한 植田관동군사령관과 함께 7시 30분까지 저녁만찬을 함께하였다. 이후 30분 정도의 휴식을 거쳐 8시부터 10시까지 약 2시간에 걸친 수뇌 회담을 개최하였다.⁹⁾ 회담의 주요 의제는 선만일여의 원칙 결정과 구체적인 실천 방법의 모색, 선만 산업경제의 불가분 관계의 심화, 선만 국방 치안과 비적 토벌의 공동대행 등이었다.¹⁰⁾ 즉, 도문회담은 “조선 만주의 최고 수뇌자로서 南총독이 시정의 신표어로 제창하는 ‘선만일체’화를 촉진하는 중요 간담회였다. 南총독을 수행한 三橋 조선총독부경무국장과 관동군사령관을 수행한 東條관동군헌병사령관은 별도의 협의를 통해서 국경경비, 비적토벌, 밀수방지 등을 위해 선만 경비기관의 연락을 긴밀히 해

7) 朝鮮總督府, 1936, 『朝鮮産業經濟調查會會議錄』.

8) 田浦雅德編, 1998, 『武部六藏日記』, 芙蓉書房出版, 150면.

9) 『中外商業新報』, 1936년 10월 31일.

10) 朝鮮總督府, 1936. 12, 『朝鮮』, 131면.

서 상호협조의 성과를 올리자는데 의견이 일치”¹¹⁾하였다. 다음은 도문회담을 둘러싼 몇 가지 의문과 논점이다.

첫째, 도문회담은 선만 양측 가운데 어느 측이 기획·주도했는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武部の 일기에 주목해 보자.¹²⁾

금번 회견은 조선측의 요청에 응한 것이다. 南총독의 만주에 대한 제스처이자, 만선융화에 부응하는 중대사이다...植田관동군사령관이 도문으로부터 귀임하였다. 지난 29일 같은 장소에서 南조선총독과 회담하였다. 회담과 관련해서 관동군 井出(대좌)참모와 조선의 鹽原비서관이 담화를 발표하였다. 南씨의 鮮滿不可分論의 제스처는 상당한 의의를 갖는다. 산업, 치안, 이민, 인사 등에 관해서 종래 선만간의 소원했던 것이 금후 면목을 일신하게 된 것은 진정 일만의 합작이다.

이상, 선만 수뇌의 도문회담을 기획하고 주도했던 것은 다름이 아닌 1934년 12월 이래 제12대 관동군사령관을 거쳐 1936년 8월 제8대 조선총독에 취임한 南였다. 이는 南총독이 총독 취임 이후에도 만주국의 실질적인 헤게모니였던 관동군사령부에 대해서도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관동군사령부를 움직여서 도문회담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고 하겠다.

둘째, 南조선총독이 총독 취임 이후 단지 2개월 만에 수뇌 회담을 개최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南씨의 八面玲瓏, 大野씨의 實質, 단, 양자 모두 八方을 배려하는 습관”¹³⁾ 등등 武部の 지적과 함께 당시 朝鮮公論社 사장 里吉基樹의 다음과 같은 사설에 주목해 보자.¹⁴⁾

금년(1936년) 여름 前관동군사령관으로 전만주의 덕망을 쌓았던 南대장이 조선총독으로 취임하였고, 前關東軍總長이었던 大野綠一郎이 정무총감으로

11) 朝鮮公論社, 1936. 11월, 『朝鮮公論』24-11.

12) 田浦雅德編, 1998, 『武部六藏日記』, 芙蓉書房出版, 150~152면.

13) 田浦雅德編, 1998, 『武部六藏日記』, 芙蓉書房出版, 134면.

14) 朝鮮公論社, 1936. 11, 『朝鮮公論』24-11.

동만 재선함으로서 만주 현지에서도 조선에 대한 감정과 인식도 크게 바뀌었다. 더욱이, 小磯조선군사령관은 만주국 건국의 공로자이며, 前관동군참모장이다. 植田관동군사령관은 前조선군사령관으로 조선에 대한 이해가 깊고, 松岡만철총재는 南총독의 오랜 친우이다. 大村만철부총재는 이미 오랫동안 조선에 재임하였고, 만주국 요로에 재직하는 조선의 친우이다. 이러한 호조군은 선만의 친교의존을 적극 강화할 수 있는 호기이다. 南총독은 취임과 동시에 선만일여를 제창하였고, 부하 막료의 만주출장과 시찰을 장려하였다. 조선은 새로운 방침에 입각해서 노력함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적당한 기회에 선만 수뇌 회견을 실현한 것이다.

물론, 南총독은 1936년 8월 조선총독 취임 이후에도 관동군을 비롯한 만주국 관계자와의 긴밀한 소통과 함께 선만협력을 논의하였다. 실제로, 1936년 11월 9일 南총독은 일본 방문을 마치고 만주국으로 귀임 도중이었던 당시 松岡 만철총재와 2시간에 걸친 회합을 가졌다. 그 내용은 도문회담의 성과는 물론이고, 당시 선만협력의 주요 현안이었던 북철 이양문제, 압록강 수력발전계획, 조선인의 만주 이민정책 등 이었다.¹⁵⁾ 따라서 南총독이 단지 2개월만에 도문회담을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군부내 소장파 장교와 첨예한 갈등관계에 있었던 宇垣총독과는 달리 관동군사령관 재직 당시부터 만주국과 관동군사령부의 다양한 인맥과 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하겠다.

셋째, 선만 수뇌 회담의 장소가 당초 조선에서 만주국으로 바뀌었던 저간의 사정이다. 실제로, 선만 수뇌 회담의 개최 여부를 최초로 언급했던 것은 조선총독부의 관제언론 매일신보였다. 매일신보는 선만 수뇌회담의 하루 전 날인 10월 28일자 석간에서 “[南총독은] 시찰 도중 29일 혹은 30일 朱乙에서 마침 來鮮하는 植田駐滿대사와 회담으로 갖기로 하였다. 이 회담으로 남총독이 주창하는 선만 의존관계가 점차 확대·심화될 것”¹⁶⁾이라 언급하였다. 당초 수뇌 회담의 여부는 극비사항으로 취급되면서 그 일자와 장소마저

15) 朝鮮總督府, 1936.12, 『朝鮮』261.

16) 『毎日申報』, 1936년 10월 28일.

도 불분명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매일신보가 언급한 회담 장소가 당시 북선 지역의 대표적인 온천 지대였던 함북 주을에서 만주국 통화성 도문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당초 관동군사령관이 선만 국경을 월경하는 비공식 방문 일정이었으나, 돌연히 南총독의 월경 입만으로 바뀌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나중에 검토하는 바와 같이 南총독이 재선 혹은 재만조선인에 대한 일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2) 圖們會談에 임하는 조선측의 입장

나아가, 도문회담에 참가한 선만 수뇌의 수행원은 만주국측의 경우 東條헌병사령관, 竹下대좌, 井出중좌, 渡邊소좌, 四方소좌, 山本대사관서기관, 河村간도총영사, 三浦간도국행정과장이었고, 조선측은 三橋총독부경무국장, 相川외사과장, 鹽原비서관, 丹下보안과장, 藤村소좌, 兪島함북도지사, 筒井경찰부장, 田中본부통역관, 服部본부사무관(신경특과원)으로 양측 각각 8명이었다. 나아가, 29일 오후 10시 40분 회담 종료와 함께 井出관동군참모와 鹽原총독비서는 도문회담에 대한 다음과 같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¹⁷⁾

南총독은 금번에 북선을 시찰하였는데 植田관동군사령과도 마침 시기를 같이 하여 간도방면 순시 도중에 있었다. 이 기회에 양 수뇌는 쌍방의 회견 제의가 있었고, 그래서 南총독은 천황 폐하의 재가를 받아서 29일 도문 영사관 분관에서 植田관동군사령관과 회견하였다. 장래 만선간의 협의사항에 관해서 간단할 것이다... 수행원도 각각 소관사항을 논의하였다. 회견은 시종일관 화기에애한 분위기였고, 장래 선만 관계도 일층 긴밀화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선만 수뇌 회담 그 자체가 쌍방이 제의해서 실현되었고, 그래서 회담 그 자체도 지극히 偶然的 一致였다는 것이다. 더구나, 우연의 일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天皇의 裁可까지 받았다는 것이

17) 『興亞協會』, 1936년 12월호.

다. 그러나 도문회담은 1932년 만주국 건국 이래 선만 수뇌가 개최한 최초의 회담이었고, 그 내용도 상당한 협의와 절충을 요하는 중요 현안이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쌍방의 제의는 별개로 하더라도 우연의 일치와 천황의 재가 운운에 대해서는 앞서 武部の 일기를 고려하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는 선만 수뇌 회담을 기획·주도했던 조선측이 도문회담에 대한 여러 오해를 의식하면서도 회담의 획기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였다고도 하겠다.

나아가, 鹽原은 만주국측과는 달리 도문회담에 대해 별도의 담화를 발표하였다.¹⁸⁾ 그 요지는 “선만일여의 정신으로 금일의 동양문제를 대처해야 하는 것은 시대의 요구이다. 금후 총독부 간부의 만주시찰과 함께 재만기관과의 연락을 긴밀히 하고, 관동군과 만주국 고위 직원이 종종 來鮮하는 것은 그 정신에 철저를 기하는 소이일 것이다. 금번 百尺竿頭의 일보로서 관동군 사령관, 조선총독 양자가 직접 만나서 선만의존의 영구적인 기초를 결정하는 역사적 회견이 실현되었다”¹⁹⁾고 강조하였다. 조선측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만주국의 재만조선인에 대한 정치적 배려와 인적 교류의 촉진을 주장하였다. 만주국 건국이념이 민족협화이고, 100만 재만조선인도 만주국의 중요 구성분자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만주국은 재만조선인을 愛撫哺育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재만조선인도 만주국 국민정신을 함양해서 만주

18) 만주국은 1941년 4월 선만 수뇌의 新京 회담(제2차 선만협정)에 앞선 圖們 회담을 제1차 선만협정으로 규정하였다. 당시 滿洲年鑑에 따르면, 만주국의 도문회담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았다. 즉, “1936년 10월 29일 밤 도문영사관 본관에서 조선시찰 중의 南조선총독과 간도시찰 중의 植田관동군사령관이 회견하였다. 도문회담은 만선일여 정신에 입각해서 양지의 의존관계를 협의한 것이다. 만주국 독립 이전 만선의 경계는 국경선이었고, 외교, 산업, 교통, 정치적으로도 높은 장벽을 쌓았다. 그러나 만주국 성립 이후 일만일체 관계로 바뀌면서 높은 장벽을 제거하고, 쌍방의 融和互助에 따른 쌍방의 편리와 발달을 도모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만선블럭 경제를 구축하고 만선불가분의 관계를 협정하고자 하였다”이었다는 것이다. 滿洲帝國協和會中央本部調査部編, 1943, 『國內に於ける鮮系在國民實態』, 101면.

19) 『興亞協會』, 1936년 12월호와 『朝日新聞』, 1936년 10월 31일 석간. 『毎日申報』, 1936년 10월 31일 석간.

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아가, 금후 만주국은 필요한 관공리를 조선인 가운데서도 채용하고, 조선총독부도 우수한 관리를 파견해서 만주국 요직에 참가할 것을 주장하였다. 물론, 조선총독부도 만주국 및 재만기관으로부터 우수한 관리를 채용해서 선만일여 정신을 구현한다는 것이었다.

둘째, 선만 국경 인식의 변화를 강조하였다. 즉, 압록강과 두만강이 선만 국경이었던 것은 만주사변 이전 일이며, 만주국 건국 이후 선만 양측은 국경이 있어도 없는 것과 같이 일체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만주국의 비적은 일만 양국의 공동의 적이며, 쌍방의 군경 당국은 긴밀히 연락해서 비적소탕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⁰⁾ 나아가, 밀수 취체에 대해서도 종래와 같이 양측의 섹션널리즘을 배격하고, 선만일여 정신에 입각해서 일층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셋째, 조선인의 만주이민은 양측의 사정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선측은 자유이민에 대한 적당한 지도·통제와 함께 만주국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조선총독부는 조선인의 만주이민자를 엄선·통제해서 만주국의 충실한 국민으로서 만주국 개발에 공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만주국의 기본 국책의 가운데 이민정책은 (1)일본이민은 장려, (2)조선이민은 통제, (3)중국인은 제한이라는 3원칙이기 때문에 조선측이 같은 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도문회담은 약 2시간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선만일여 슬로건에 입각한 양측의 정치경제적 현안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에 그쳤다. 이후 구체적인 사안별 협의는 담당 관료의 상호 방문과 의견 교환으로 보다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鹽原의 담화 내용에도 불구하고, 당시 조선측이 적극

20) 三橋조선총독부 경무국장은 1936년 10월 29일 오후 5시부터 東條관동군헌병사령관과 선만 국경경비에 관한 협력을 논의하였다. 주요 논의 사항은 “(1)조선경찰관의 警視와 警視, 경무급 가운데 우수한 자를 장래 만주국이 채용한다, (2)공비도벌은 선만의 적이며, 적극적으로 연락해서 토벌하고자 선만 경찰서의 연락에 필요한 경비전화를 신설한다, (3)금후 조선측은 만주국의 경비통제위원회에 참가한다, (4)밀수 취체에 대해서는 쌍방이 협력한다”는 것이었다. 『鮮滿國境의 明朗化』 『興亞協會』, 1936년 12월.

적으로 도문회담을 기획하고, 주도했던 정치경제적 사안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당시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南總督·植田關東軍司令官會談要領’은 다음과 같았다.²¹⁾

(1)종래 조선에서 일반민의 만주국 건설 사상은 出先鮮人(재만조선인)의 타산적 고려만으로 2천만 선민이 건국의 창업에 그 책임과 열의를 결여하였다. 이 때문에 출선선인은 선내 有識선인에 비해서 뚜렷하게 저급한 자가 많았고, 더구나 선내 유식선인 가운데 비교적 명망자가 건국의 창업으로부터 소외되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도 현재 선내의 출중한 선인을 만주국 정부의 중앙 및 지방 관료로 상당수 등용해서 만주국 내부에서 선인도 오족협화에 입각해서 건국의 창업에 참가할 수 있다는 식으로 人心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2)간도성 주민의 대부분은 선인임으로 이들 지역에 대해 당초부터 만주국의 威令을 펼친다는 의미와 함께 선인도 그 소임을 담당하게 해서 만주국 건국을 내부적으로도 공헌한다는 식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선인을 省長, 교육청장, 참사관, 視學 등 주요 부문의 관리로 등용하는 방법이 적당하다. (3)在滿 조선인 교육권의 만주국 이양은 앞서 조항의 실시와 함께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상, 도문회담에 임하는 조선총독부측의 입장은 당시 조선통치를 저해하는 재만조선인의 치외법권 철폐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해결책의 모색이었다. 즉, 재만조선인 교육행정권의 만주국 이관에 대해 조선측은 조선인 유력자의 만주국 관리 임용을 전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²²⁾ 결국, 도문회담은 앞서 공동성명과 같이 선만 수뇌의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南총독이 관동군 사령관 재임시절부터 치밀하게 추진한 기획회담이었고, 당시 식민지 조선과 만주국 양측이 당면한 정치경제적 현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호혜적인 바게닝(bargaining)의 場 그 다름이 아니었다고 하겠다.

21) 朝鮮總督府, 1936, 「南總督·植田關東軍司令官會談要領」, 『大野綠一郎文書』, 國立國會圖書館.

22) 朝鮮總督府, 1936. 8, 「滿洲國に於ける治外法權の撤廢と朝鮮」, 『調査月報』7-8.

3) 南조선총독과 ‘鮮滿一如’ 슬로건의 제창

한편, 도문회담에 대한 일본내 언론은 “南·植田회담의 결과, 선만일여의 실현, 중요 현안의 일거 해결, 의존관계 확립에 대한 기대”²³⁾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만 수뇌의 도문회담을 계기로 南총독이 제창하는 ‘선만일여’ 슬로건이 최초로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문제는 南총독이 도문회담을 기획·주도하게 되었던 보다 구체적인 저간의 사정이다.²⁴⁾ 이와 관련해서는 1941년 4월 南총독과 매일신보와의 다음과 같은 인터뷰에 주목하고자 한다.

원래 선만일여의 根底는 만주사변을 계기로 하는 만주국의 독립과 일만 일체불가분의 관계 확립이다. 강덕2년(1935년) 만주국 황제가 친히 일본을 방문하고 귀경해서 回鑾訓民의 勅書를 하사하였다. 이는 내가 만주국에 있을 때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만인의 생각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일만불가분 관계와 선만불가분 관계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내가 만주국에서 경험한 조선판이다. 당시 조선은 만주국을 외국시하였던 반면, 만주국은 조선을 등한시하고 오로지 內地만을 관념하였다. 이와 같이 선만 양측이 모두 사태의 변화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은 지도정신을 결여했기 때문에 그래서 1936년 10월 29일 도문회담을 갖게 되었다. 이 회담의 목적은 선만일여에 입각해서 선만 양 관민의 지도 방침을 상담한 것이다. 먼저, 종래의 국경관을 폐기하는 것이다. 국경은 압록강과 두만강이 아니라 만주국이 독립하면서 진정한 국경은 우수리강과 흑룡강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국경은 멀리 전진하였고, 산업, 경제, 교통 등 선만간에 건설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선만일여의 기치 아래 서로 상의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우편, 외환, 수력전기, 경찰 등 특히 선만 양측의 입장에서 공공의 적이라 할 수 있는 만주국 건설을 방해하는 비적을 소탕하는 것이었다.

이상, 도문회담에서 南총독이 선만일여를 제창했던 것은 만주국 건국 이

23) 『朝日新聞』, 1936년 10월 31일 석간.

24) 『毎日申報』, 1941년 4월 19일 석간.

후 선만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지향의 제국질서를 재구축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南총독은 1920년대 후반 조선군사령관을 거쳐 1934년 12월 이후 관동군사령관 재임시절 만주국이 주도하는 산업개발5개년계획과 치외법권 철폐문제 등 만주국의 주요 정책 현안에 깊이 관여하였다. 또한, 南총독은 당시 군부는 물론이고 정계를 포함한 제국정부의 수뇌진 가운데서도 보기드문 이른바 ‘鮮滿通’이었다. 따라서 “선만일여는 南이 조선군사령관을 비롯해서 관동군사령관으로 재직하던 당시의 체험으로부터 안출된 새로운 경륜”²⁵⁾ 혹은 “만주국 건국에 협조하는 것 그 자체가 조선 통치에 긴요하다”²⁶⁾는 나름의 제국통치관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도문회담에서 南총독이 선만일여 슬로건을 제창했던 보다 구체적인 경위는 다음과 같았다.²⁷⁾

만주국 건국 이후 京圖철도의 시설, 나진항의 축항, 서일본항로의 개척 등 彼我的 교섭은 긴밀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래 양측의 통치 당국은 친화성을 결여하였다. 이러한 현실은 만주국의 다양한 기획에 조선이 소외됨과 동시에 재만동포의 시설을 경원시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 근본 원인은 관동군 막료와 舊朝鮮政權(字垣총독)과의 감정대립은 논외의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하루 빨리 척결되어야 했지만, 그 발본쇄신이 방임되어 왔다. 최근에 상당한 감정완화의 경향에 있다지만, 관동군, 만주국정부, 만철 등과 조선총독부간의 정치경제적 하등 연락통제도 없었다.

실제로, 1933~34년 전후 ‘政界의 또 다른 惑星’²⁸⁾으로 급부상한 南의 정치적 위상과 갈등지향의 선만관계를 고려하면, 상호협력을 전제로 하는 선만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의 식민통치관을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하겠다. 그렇기 때문이야말로 南총독은 도문회담 이후 “내선일체는 진부하다. 선만일여

25) 東邦山人, 1938. 1, 「南總督の人物と其政策を語る」 『朝鮮公論』362.

26) 宮田節子, 2000, 「南總督時代の行政－大野綠一政務總監に聞く(1959. 11. 4.)」 『東洋文化研究』 2, 45면.

27) 朝鮮公論社, 1936. 11, 『朝鮮公論』24-11.

28) 中島康比古, 1995, 「<字垣一成文書>字垣擁立運動」 『字垣一成關係文書』, 芙蓉書房出版.

로 나아가야 한다”²⁹⁾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상, 선만 수뇌의 도문회담은 양측이 당면한 정치경제적 현안을 논의하고 하는 역사적인 회담이었다. 회담의 주요 목적은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1936년 10월 조선산업경제조사회에서 결정한 선만 경제의 긴밀한 협력방침에 입각한 “宇垣정책의 재음미”³⁰⁾와 선만 경제의 블록화를 추진함으로써 선만 불가분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제 합작회의였다. 나아가, 도문회담에서 南총독이 제창한 ‘南이즘’으로도 회자되었던 선만일여 슬로건은 宇垣총독기에 극명하게 표출된 경성이데올로기(內鮮一體)와 신경이데올로기(五族協和)의 상극을 해소하고자 하는 새로운 제국통치 이데올로기의 지향성을 갖는 것이었다.

3. 「帝國」차원의 다양한 반응

다음은 도문회담과 선만일여 슬로건에 대한 제국 차원의 다양한 반응이다. 이와 관련해서 “만주의 일만인 가운데는 선만일여설을 반기지 않는 자가 있다. 이는 조선이 만주국에 대해 선만일여설을 호소하더라도 만주로서는 조선으로부터 얻는 것이 적고, 조선인의 만주이주를 조장할 뿐이어서 도리어 귀찮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조선 현지의 조선인 가운데서도 선만일여설이 조선·조선인을 만주·만주국인과 동일해서 곤란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있다. 심지어 내지인 가운데 선만일여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며 조소하는 자”³¹⁾도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하에서는 그 실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자.

29) 東邦山人, 1938. 1, 「南總督の人物と其政策を語る」 『朝鮮公論』362.

30) 『外交時報』767, 1936년 11월.

31) 「鮮滿一如の説」 『朝鮮公論』第345号. 1937년 5월.

1) 일본 「帝國議會」의 우려

도문회담과 관련해서 당시 일본 국내 언론은 “南·植田會談의 성과, 선만간 중대 문제의 해결… 선만일여 정책의 확립을 위한 역사적인 회견… 선만 블록경제의 확립과 선만 경제의 불가분 관계를 협정하는 선만 양 수뇌부의 경제합작을 협의”³²⁾ 혹은 도문회담의 성과를 “선만 종합주의 경제정책을 결정 혹은 이는 大英帝國의 경제회의에 비견되는 위대한 계획”³³⁾이라 평가하였다. 그러나 당시 일본 정계 원로들은 도문회담에서 합의한 선만협력의 현지적 해결방식과 관련해서 “최근 南조선총독과 植田관동군사령관 양측으로부터 北支에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는 운동의 建白書가 제출되었다. 일종의 倒閣의 前提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신문이 斷乎一蹴 혹은 斷乎排擊 등 민심을 자극하는 사구를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³⁴⁾는 입장으로 급격한 선만관계의 긴밀화에 대한 당후과 의혹의 눈초리였다.

더구나, 1937년 3월 19일 개최된 제국의회 조선관계법률위원회에서는 선만일여 슬로건에 대한 비판이 비등하였다.³⁵⁾ 실제로, 3월 25일 民政黨 소속 牧山耕一을 비롯한 48명의 의원이 중의원 의장 앞으로 이른바 “질문주의서”³⁶⁾를 제출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조선총독 육군대장 南次郎씨는 작년 총독 취임 이래 ‘선만일여’라는 표어를 내걸고 新附(조선) 2천만 동포에게 호소하고 있다. 본 위원은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그 표어의 진의를 대해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大野綠一郎씨에게 질문한 바, 하등 깊은 정치적 사상적 의미를 갖지 않는 것이라는 답변을 얻었다. 그래서 南총독의 진의를 대체로 양해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슬로건이 의외의 오해를 낳는 것은 물론이고 그 오해가 초래하는 新附 민중의 착

32) 『朝日新聞』, 1936년 10월 31일 석간.

33) 『エコノミスト』, 1936년 11월 21일.

34) 原田熊雄述, 1950, 『西園寺公과 政局(제6권)』, 岩波書店, 54~55면.

35) 『大阪毎日新聞』, 1937년 3월 21일.

36) 衆議院, 1937. 3. 25, 『牧山耕一外三名提出南朝鮮總督ノ高調力說スル「鮮滿一如」ノ標語カ朝鮮統治上民心二及ホス影響ニ關スル質問主意書』.

각으로 南총독이 예상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 선만은 내선과는 전혀 관계를 달리하는 서로 대립하는 存在이다... 본 의원 일동은 일한병합 이래 슬로건은 內鮮一如이다. 그런데 현재 南총독이 갑자기 ‘선만일여’의 슬로건을 내세우면, 다수의 조선민중은 이를 오해해서 이를 전자(내선일여)를 대신하는 것으로 착각할런지도 모른다... 南조선총독이 상당히 釋明的 聲名을 내걸었지만, 슬로건의 額面用 墨跡마저도 남기지도 말고 회수해서 그 화근을 키우지 않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 판단된다. 이에 대한 총리대신과 척무대신의 소견은 어떠한가.

이상의 내용은 도문회담의 개최가 앞서 도문회담의 공동성명에서 밝힌 天皇의 裁可는 물론이고 제국정부와의 그 어떤 사전 협의도 없이 현지적 해결방식으로 추진되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당시 정우회 소속 중의원 의원들은 南총독이 제창한 선만일여가 당초 의도와는 달리 제국질서의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인이 선만일여를 1910년 조선병합 이래 추진해 왔던 내선일체의 황민화정책을 대체하는 새로운 시정원칙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즉, 선만일여 슬로건이 종래 日鮮同祖와 내선일체 등 조선통치의 시정방침을 형해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둘째, 일본인 가운데는 선만일여 슬로건이 내선일체를 대신하는 선만일체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앞서 정계원로들이 도문회담에 대한 의혹 눈초리와 같이 만주국과 조선이 또 다른 독립국가를 형성해서 대륙 진출의 전진기지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셋째, 200만 재만조선인이 선만일여를 오해해서 제국통치의 근간을 와해시킬 수 있다는 우려였다. 즉, 만주국의 일원으로 재만조선인이 선만일여를 오해하고, 여기에 조선인이 호응해서 만주국과 연계하고자 하는 운동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牧山를 비롯한 민정당 소속 의원들은 南총독이 선만일여 슬로건을 무조건 회수해서 그 화근의 萌芽를 없앨 것을 주문하였고, 이에 대한 총

리대신과 척무대신의 입장을 추궁하였다. 실제로, 3월 28일 총무대신과 척무대신의 답신은 다음과 같았다.³⁷⁾

제국의 근본적인 조선통치 방침은 명치43년 이래 일한병합 당시와 1919년 조선총독부 관제 개정 당시 勅書를 통해서 명확히 밝힌 바와 같이 일시동인의 내선 융합으로 동양 평화에 공헌한다는 것이었다. 南총독도 그 성지를 받들고 있다. 그러나 南총독이 선만일여의 자구를 사용한 것은 일만 불가분의 관계를 고려해서 만주국과 경계하는 조선의 지리적 입장에서 재선동포의 만주국에 대한 인식을 깊이하고, 특히 우호정신에 입각해서 양 지역의 경제 행정적 제반시설을 경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조금도 조선 민심을 불안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상, 제국정부의 입장은 南총독이 제창한 선만일여에 대해 조선과 만주국의 지리적 관계를 고려해서 만주국에 대한 조선인의 인식을 시정하고자 하는 단순한 행정적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우려할만한 정치적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이는 제국정부는 선만일여 정책을 정치와 경제적으로 분리해서 경제적인 측면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만주국의 입장과도 일맥상통하는 입장이라 하겠다. 나아가, 조선총독부도 이러한 제국 차원의 반발 혹은 오해 소지를 우려했기 때문이야말로 ‘일만일체’와 같이 ‘선만일체’의 직설적인 자구가 아니라 ‘선만일여’라는 보다 완곡한 자구를 고안했다고 하겠다.

2) 재만조선인 문제와 조선인의 기대

다음은 조선인의 반응이다. 당시 조선총독부 관제언론이었던 매일신보는 선만 수뇌의 도문회담에 대해 “南총독과 植田대사의 역사적 중요 회담, 두만강 건너 도문영사관 분관에서 중대 국책 문제의 신중 협의, 국경경비와

37) 拓務省, 1937. 3. 29, 「衆議院議員牧山耕藏外三名提出, 朝鮮總督ノ高調力説スル「鮮滿一如」ノ標語カ朝鮮統治上民心ニ及ホス影響ニ關スル質問ニ對スル內閣總理大臣及拓務大臣答弁書」.

이민, 선만의존의 구체화에 영구적 기초를 협의”³⁸⁾라는 제하의 1면 톱으로 다루었다. 나아가, 조선공론도 “조선 만주의 최고 수뇌자로서 南총독이 시정의 신표어로 제창하는 ‘선만일체’의 촉진을 위한 중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대대한 성과를 올렸다. 南총독의 정치적 행장에 경의를 표한다. 양자의 관계를 일변시키는 융합·협력의 실현을 기대한다. 이 같은 견지로부터 급변 양 수뇌 회견의 의의는 중대한 것”³⁹⁾이라는 지지와 함께 선만관계의 전환에 따른 재만조선인의 지위 개선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나아가, 당시 친일 언론을 대표했던 매일신보 사장 최린은 1936년 11월 6일부터 7일까지 경성일보에 “感激을 말한다”⁴⁰⁾는 제하의 논설을 게재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이는 조선통치의 본격적인 포석으로 조선 민중에게는 전도에 빛나는 광명자, 감격이다... 선만일여에 대해서 이미 조선에서는 오래 전부터 내선일여를 외쳐왔다. 그럼에도 인접하는 내선 민중은 한쪽의 우월감과 한쪽의 반감이 서로 대립해 왔다... 따라서 선만일여는 내선일여의 연장이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게 되면, 내선일여가 조선민중 사이에 자구와 같이 실현되고, 이로서 선만일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것이다. 나는 축복된 조선민중의 전도를 想望해서 말할 수 없는 감격에 빠져든다.

여기서 최린이 도문회담의 성과와 선만일여 슬로건의 등장을 말로 다할 수 없는 광명과 감격으로 간주했다는 사실이다. 나아가, 당시 봉천시 조선인학교의 이사장, 협화회 분회의 상무위원, 조선인 청년단장을 겸임했던 조원환은 도문회담과 관련해서 “조선인을 가장 동정하는 조선총독부가 만주국과 협조해서 선만일여의 새로운 정강을 정립한 것은 재만조선인과 급후만주에 진출하고자 하는 조선인에게는 실로 구명적인 복음이자, 은혜로운新政綱”⁴¹⁾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조원환의 언설은 선만일여를 내선일체

38) 『每日申報』, 1936년 10월 31일.

39) 朝鮮公論社, 1936. 11, 『朝鮮公論』24-11.

40) 『京城日報』, 1936년 11월 6~7일.

의 연장으로 관념했음을 시사한다.

한편, 武部는 “재만조선인은 물론이고 선내의 선인과 총독부 관리로부터 서도 꼭 評判이 좋지만은 않을 것”⁴²⁾이라 지적하였다. 이는 武部가 對滿國策의 일환으로 南총독 주도의 도문회담을 적극적으로 평가했던 점을 고려하면,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실제로, 1935년 8월 일본정부는 만주국에서 치외법권의 철폐 및 만철부 속지행정권의 만주국 이관을 결정하였다.⁴³⁾ 그 내용은 일본인 아동 교육의 경우, 만주국 치외법권 철폐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에 유보하지만, 재만조선인의 아동교육은 일괄적으로 만주국에 이관 조치한다는 내용이었다.⁴⁴⁾ 이러한 결정은 재만조선인의 입장에서 종래 내선일체의 조선통치 이념과 명백히 배치되는 명백한 민족차별이었다. 따라서 만주 각지의 재만조선인 민회 등으로부터 탄원서가 일본 외무성 앞으로 빗발쳤다.⁴⁵⁾ 예를 들어, 1935년 12월 봉천지역의 在滿朝鮮同胞教育機關滿洲國移管對策攻究會는 일본의 무성 重光차관 앞으로 타전된 탄원서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⁴⁶⁾

宇垣총독은 명실 공히 내선일체화의 실현을 내외에 천명하고 실행해 왔다. 그러나 같은 조선인이 단지 만주에 재유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들 자체 교육을 만주국에 일임하는 것은 일한병합 御詔勅인 一視同仁 정신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이고, 조선동포에 대한 그 이상의 치욕적인 조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在滿 2백만 조선동포는 물론이고 조선내 2천만 동포도 物情騷然해서 상당한 동요를 보일 것으로 믿는다.

41) 曹元煥, 1937, 『鮮滿一如と民族協和』, 滿洲帝國協和會, 1~2면.

42) 田浦雅德編, 1998, 『武部六藏日記』, 芙蓉書房出版, 150면.

43) 「治外法權撤廢及滿鐵付屬地行政權/調整並ニ移讓ニ關スル機關(諸委員會)並決定要綱」 『大野綠一郎文書』, 國立國會圖書館.

44) 만주국의 치외법권 철폐 이후 재만조선인의 교육에 대해서는 倉島至, 1941. 10, 「滿洲國に於ける朝鮮人教育に就いて」 『朝鮮』265.

45) 奉天省宇佐美總領事, 1935. 12. 25, 「在滿朝鮮人學校教育關係雜件 第2卷」 外務省.

46) 滿洲國奉天十間房在滿朝鮮同胞教育機關滿洲國移管對策攻究會, 1935. 12. 24, 「在滿朝鮮人學校教育關係雜件 第2卷」 外務省.

또한, 같은 문제에 대한 조선인의 동향에 대해서는 1937년 4월 만주국 국무총리 장경혜의 경성방문에 대한 조선인의 반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삼천리사는 조선인 유력 지식인을 대상으로 장총리의 경성방문에 대한 조선인 지식인들의 소감을 게재하였다.⁴⁷⁾ 그 내용은 ‘차별 대우하지 맙시다!’라는 주제로 만주국의 국시였던 민족협화와 선만일여 슬로건에 입각해서 재만조선인에 대한 평등한 권리와 의무의 부여를 탄원하였다. 실제로, 장총리는 4월 24일 귀국에 앞서 조선호텔에서 마련된 송별회에서 “치외법권의 전면적인 철폐가 예상되는 와중에서 일부 반도인 가운데는 만주에서의 지위에 관해 다소 우려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재만조선인은 만주국 구성분자의 일원으로 그 입국정신을 양해한다면, 이는 단지 기우에 불과하다”⁴⁸⁾고 답변하였다.

이상, 치외법권 철폐에 따른 재만조선인의 지위문제와 조선인의 만주이민을 둘러싼 조선인의 동요와 반발을 고려하면, 당시 만주국의 치외법권 철폐와 관련해서 재만조선인 문제에 깊여 관여했던 武部の 지적은 결코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었다. 그랬기 때문이야말로 일개 지방정부의 首將에 불과했던 南총독이 일국 정부의 首班이었던 국무총리까지 초청해서 선만일여를 선전하는 정치적 마스크트 혹은 정치적 아바타(avatar)로 적극 활용했던 것이라 하겠다. 결국, 재만조선인의 입장에서 선만일여 슬로건은 자신들의 불안한 지위가 개선될 수도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 혹은 재만조선인의 지위 향상과 보호를 위해 조선총독부와 만주국 정부가 적극 협력하고 있음을 선전하는 문화정치 그 다름이 아니라 하겠다.

3) 만주국의 기대와 반발

다음은 만주국측의 반응이다. 먼저, 재만일본인 사회에 대해 영향력있는

47) 「在滿 백만 동포의 발전을 위하여, 조선에 온 張총리에 모하는 我等의 書」 『삼천리』9-4, 1937년 5월 1일.

48) 本誌記者, 1937. 6, 「張總理訪鮮動靜」 『朝鮮』265.

잡지였던 ‘만주평론’의 논설이다. 먼저, 도문회담에 대해 “지난 조선총독부에서 개최되었던 조선산업경제조사회 방침에 입각해서 宇垣정책의 재미미와 함께 선만 블럭경제 확립을 추진하고, 선만 경제의 불가분 관계를 협정하는 선만 수뇌의 경제합작회의였고, 선만 공동의 이해를 갖는 치안유지문제, 경비문제, 이민문제”⁴⁹⁾을 논의하였다는 것이다. 나아가, 앞서 조선총독부 鹽原비서관의 담화를 인용해서 회담의 요지를 소개하였다. 즉, 도문회담을 ‘선만 의존의 영구적인 기초를 결정하는 역사적 회견’ 혹은 ‘선만 정치블럭의 중요한 道標의 설치’라 평하였다. 그러면서도 다음과 같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⁵⁰⁾

선만일여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선만 경제블럭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는 것은 작금의 정세에 비추어 의외다... 선만경제블럭의 문제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일선만 경제블럭의 문제이다. 더구나, 조선은 단종농업을 탈피해서 공업 중심의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 만주국은 최근 제2의 건국코스를 지향하고 있으며, 국가경제의 전면적 재편성 시점이다. 따라서 일선만 경제블럭의 확립을 일본의 전반적 발전과 대륙일본의 약진이라는 대국적 견지에서 보면, 금번 회견에서 그 중요 국책결정의 근본 정책으로 일만공동경제위원회를 일층 강화·확충하고, 조선을 포함한 일선만경제공동위원회의 출현을 기대한다...단지 선만일여가 단지 정치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이를 계기로 가까운 장래에 우리들이 기대하는 일선만 정치경제의 실질적인 변화에 조응하는 정책이 구현될 것을 희망한다.

이상의 요지는 도문회담이 정치적 문제에 치중함으로써 시급한 경제적 논의가 결여하였음에 아쉬움을 표하는 한편, 일선만 경제블럭 형성을 위한 경제공동위원회와 같은 경제협력 기구의 설치를 기대한다는 것이었다.

다음은 만주국 내부의 반응이다. 이와 관련해서 “국경은 흑룡강으로 이동

49) 滿洲評論社, 1936. 1. 14, 「南·植田會談の成果」 『滿洲評論』.

50) 滿洲評論社, 1936. 1. 14, 「南·植田會談の成果」 『滿洲評論』.

했다는 지적과 같이 그 진의는 양지의 경제와 문화의 전면적 제휴였다. 그러나 사실은 만주측의 뚜렷한 불평을 샀다. 이는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다. 재만조선인 문제는 당시 만주국으로서 그 始末에 지쳐있는 상황에서 그 국제적 운동에 소극적 태도를 견지했다. 그러나 근본 원인은 역시 만주측이 대일의존 방침으로부터 의기양양해서 조선의 실력을 과소평가하고, 조선을 무시했기 때문”⁵¹⁾이었다. 이와 관련한 당시 조선공론사 사장 里吉의 논설은 다음과 같았다.⁵²⁾

南정치의 주제인 선만일여의 대방침에 대해 만주측 일부에서 불만의 소리가 있었던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그 이유는 그 용어가 만주국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조선이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고 조선 독자의 시정방침으로부터 선만 제휴의 신방침으로 전환한 이래 만주개발을 위해서 상당히 희생적인 공헌을 해왔던 것을 뚜렷한 사실이고, 선만일여를 외치는 소이는 국가 본위의 선의 그 다름이 아니다... 일만일체라고 하면 독립국 상호간의 친선관계를 강조하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선만일여는 만주를 일본의 한 지방인 조선의 예하로 보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하는 자들이 만주국 상충부의 일계 관리와 특수회사의 내지인 간부들이라는 것이 유감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조선측이 제창하는 선만일여 슬로건에 대해 반발의 주체가 ‘만주국 상충부 일계 관리와 특수회사의 내지인 간부들’이었다는 사실이다. 이 가운데 만주국 특수회사 간부들의 반발은 선만일여 슬로건을 강매하는 형식으로 조선측이 선만협력을 주도했기 때문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조선총독부가 주도하는 선만협력의 여러 프로젝트가 조선 재계의 이해만을 반영했고, 만주국 재계는 그 이권으로부터 소외되었기 때문이었다.⁵³⁾

51) 全國經濟調査機關聯合會朝鮮支部編, 1941~42, 『朝鮮經濟年報』, 改造社, 315면.

52) 里吉基樹, 1938. 7, 『鮮滿一如を曲解する勿れ』, 『朝鮮公論』304, 2~4면.

53) 1937년 5월 조선과 만주국은 대규모 압록강수력개발을 협의하였고, 그 와중에서 사업의 실행 주체를 둘러싼 선만 재계의 갈등이 발생하였다. 즉, 당시 滿洲國土木建築協會 이사

다른 한편, 만주국 상층부 일계 관리의 반발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서 1937년 3월 일본 제국의회 중의원 회의에서 牧山를 비롯한 민정당 소속 의원들이 제기한 선만일여 슬로건에 대한 우려와 같이 재만조선인이 선만일여를 정치적으로 오해하고 부화뇌동함으로써 만주국측이 추구하는 민족협화를 형해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만주국 관리는 물론이고 일반 언론에서도 선만일여의 자주 사용을 극도로 기피하였다. 실제로, 1937년 4월 경성을 방문한 장경혜 만주국 총리도 당시 ‘滿鮮一家’라는 나뉠의 字句를 고안해서 선만관계를 표상하고자 하였다.

이상, 1936년 10월 선만 수뇌의 도문회담과 선만일여 슬로건에 대한 제국내 반응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였다. 즉, 도문회담에 대해서는 일선만 경제블럭의 형성과 분업체제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적극 평가했던 반면, 선만일여 슬로건 그 자체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에 따른 다양한 반응이었다. 이는 서로 다른 정치경제적 이해에 입각한 의도의 괴리 혹은 동상이몽을 일면을 시사한다. 즉, 선만일여 슬로건은 南총독의 의도와는 다르게 상이한 정치적 입장과 종래의 식민통치 이데올로기의 磁場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였음을 시사한다.

4. 맺은말

마지막으로, 이하에서는 선행 연구와 관련한 도문회담과 南총독이 제창한 선만일여 슬로건이 갖는 역사적 의의를 지적하는 것으로 맺은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장이었던 榑谷仙次郎은 조선총독부와 당시 일질제벌의 총수였던 野口適 앞으로 “압록강 공사는 출자가 만주와 조선의 반반임으로 공사도 선만 양국의 적당한 업자를 지명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野口는 “우리측은 이미 지정 청부인으로 間, 西松, 松本の 三組가 있다. 이로써 충분하기 때문에 압록강 공사는 이들 三組에 맡길 것”이라 一言之下에 거절하였다. 飯吉精一編(1969), 『榑谷仙次郎日記』, 榑谷仙次郎日記刊行會(1937년 5월 7일과 18일분).

1936년 10월 도문회담은 南총독이 1934년 말 이후 관동군사령관 시절부터 치밀하게 기획하고 주도한 수뇌회담으로 선만관계의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즉, 도문회담에 임하는 조선측의 입장은 만주국이 요청한 압록강 공동개발을 비롯한 경제적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는 한편, 조선인의 만주이민과 재만조선인의 문제 그리고 조선인의 만주국 관리임용에 대한 만주국측의 양해와 협력을 요청하였다. 결국, 선만 수뇌는 도문회담을 통해서 당시 만주국이 추진하는 산업개발5개년계획과 관련한 경제 문제와 조선통치의 정치적 안정화를 추구하는 조선총독부의 정치적 현안을 맞교환하는 식민정부 차원의 정치경제적 빅딜(big-deal)에 합의할 수 있었다. 이는 도문회담이 1930년대 전반 만주국 출현 이후 갈등과 대립의 선만관계로부터 상호의존과 협력의 선만관계로의 전환임과 동시에 이를 표상하는 선만일여 이데올로기가 최초로 등장한 역사적인 회담이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선만일여 슬로건은 1930년대 후반 이른바 ‘鮮滿一如의 金字塔’⁵⁴⁾로 회자되었던 대규모 압록강 수력전기개발을 비롯한 대대적인 선만협력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이데올로기적 기제로 작용하였다. “일만일체는 원칙적으로 결정되었고, 그 가운데 내선일체는 핵심적 기조임과 동시에 선만일여도 핵심적 중점이다. 즉, 내선일체와 선만일여를 포함·융합하는 것이 진정한 일만일체이다.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일만불력이고 일만일체화”⁵⁴⁾라는 지적과 같이 선만일여는 종래의 경성이데올로기(내선일체)와 신경이데올로기(민족협화)의 상극을 해소하고, 새로운 제국질서를 모색하는 식민통치 이데올로기의 지향성을 갖는 것이었고, 이후 선만협력을 제약하는 이데올로기였다.

따라서 종래 연구가 식민정부 차원의 정치적 상호작용과 반작용 혹은 그 쌍방향성에 주목하면서도 그 정치적 권익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지향의 선만관계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1936년 10월 선만 수뇌의 도문회담의 역사적 의의와 선만일여 슬로건의 등장 배경을 고려하면, 선만 양측은 제국 차

54) 賀田直治, 1937. 8, 「日滿一體と朝鮮の立場」 『朝鮮公論』293.

원의 안정과 질서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공유·실천함으로써 새로운 제국질서를 모색하고자 하였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1. 자료

- 『三千里』, 『朝鮮』, 『朝鮮公論』, 『滿州評論』, 『東洋』, 『中央公論』, 『朝鮮工業組合』, 『大阪每日新聞』, 『京城日報』.
- 京城商工會議所, 1933, 『滿洲國の經濟事情に就て-併せて鮮滿經濟提携の將來考察』.
- 關東軍參謀長板垣征四郎, 1936. 8, 『在滿朝鮮人指導要綱ノ件』.
- 藤原 泰, 1942, 『滿洲國統制經濟論』日本評論社.
- 滿洲國, 1936, 『治外法權撤廢及滿鐵付屬地行政權ノ調整並ニ移讓ニ關スル機關(諸委員會)並決定要綱』 『大野綠一郎文書』, 國立國會圖書館.
- _____, 1937, 『治外法權撤廢ノ實績』 『大野綠一郎文書』, 國立國會圖書館.
- 滿洲國通信社政經部編, 1942, 『滿洲經濟十年史』滿洲國通信社.
- 滿洲日日新聞社, 1936, 『滿州年鑑』.
- 滿洲帝國協和會中央本部調査部編, 1943, 『國內に於ける鮮系在國民實態』.
- 滿鐵產業部, 1937, 『鴨綠江經濟圈調査報告書』.
- 小野久太郎, 1933, 『朝鮮と滿州國』朝鮮經濟日報社.
- 宇垣一成, 1935, 『朝鮮を語る』實業之日本社.
- 宇垣一成文書研究會, 1995, 『宇垣一成關係文書』, 芙蓉書房出版.
- 原田熊雄述, 1950, 『西園寺公과 政局』제6권, 岩波書店.
- 陸軍省, 1936, 『陸軍次官ヨリ朝鮮政務摠監へ懇談要旨』 『大野綠一郎文書』, 國立國會圖書館.
- 田浦雅德編, 1998, 『武部六藏日記』芙蓉書房出版.
- 朝鮮工業協會, 1934, 『鮮滿工業の對立的關係と其の調整』.
- 朝鮮貿易協會, 1937, 『鮮滿一如의 字句의 問題』 『朝鮮貿易振興座談會』.
- 朝鮮總督府, 1936, 『南總督・植田關東軍司令官會談要領』 『大野綠一郎文書』國立國會圖書館.
- _____, 1936, 『重要事務引き續き書』 『大野綠一郎文書』, 國立國會圖書館.
- _____, 1936, 『朝鮮產業經濟調査會會議錄』.
- 趙元煥, 1937, 『鮮滿一如と民族協和』.
- 衆議院, 1937, 『牧山耕藏外三名提出南朝鮮總督ノ高調力說スル'鮮滿一如'ノ標語カ朝鮮統治上民心二及ホス影響ニ關スル質問主意書』.
- 拓務省, 1937, 『衆議院議員牧山耕藏外三名提出, 朝鮮總督ノ高調力說スル'鮮滿一如'ノ標語カ朝鮮統治上民心二及ホス影響ニ關スル質問二對スル內閣總理大臣及拓務大臣答弁書』.
- 樞密院, 1936, 『治外法權撤廢及滿鐵付屬地行政權ノ調整及至移讓ニ對スル滿洲國側の準備』 『大野綠一郎文書』.

2. 단행본 및 논문(국문, 일본)

- 윤취탁, 2001, 「만주국의 2등 국(공)민, 그 허상과 실상」 『역사학보』제159권.
- 이승렬, 1996, 「1930년대 전반기 일본군부의 대륙침략관과 조선공업화정책」 『국사관논총』제67권.
- 이인영, 1984, 『한국만주관계사의 연구』, 을유문화사.
- 임성모, 1993, 「만주국 협화회의 대민지배정책과 그 실태」 『동양사학』제42권.
- _____, 2009, 「중일전쟁 전야 만주국·조선 관계사의 소묘 : ‘日滿一體’와 ‘鮮滿一如’의 갈등」 『역사학보』제201집.
- 지수걸, 1994, 「1930년대 전반기 부르조와 민족주의자의 ‘민족경제 건설전략」 『국사관논총』제51권.
- 한석정, 1997,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동아대학교출판부.
- _____, 2003, 「만주국과 조선과의 관계」 『아시아연구』제19호.
- _____, 2003, 「지역체계의 허실 : 1930년대 조선과 만주의 관계」 『한국사회학』제37권 제5호.
- 한석정, 노기식 편, 2008,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출판.
- 岡本眞希子, 2008, 『植民地官僚の政治史 : 朝鮮・台湾總督府と帝國日本』, 三元社.
- 姜尙中編, 2010, 『大日本・滿州帝國の遺産(興亡の世界史)』, 講談社.
- 宮田節子, 2000, 「南總督時代の行政-大野綠一政務總監に聞く(1959.11.4)」 『東洋文化研究』 2号.
- 大江志乃夫, 2005, 『岩波講座 近代日本と植民地: 膨張する帝國の人流』, 岩波書店.
- 滿洲移民研究會, 1972, 『日本帝國主義下の滿洲』, 御茶の水書房.
- 副島昭一, 1993, 『「滿洲國」統治と治外法權撤廢』山本有造編, 『滿洲國の研究』,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 山本有造, 2003, 『「滿洲國」の經濟史研究』, 名古屋大學出版會.
- 松浦正孝, 2010, 『「大東亞戰爭」はなぜ起きたのか』, 名古屋大學出版會.
- 安富歩・深尾葉子, 2009, 『「滿洲」の成立』, 名古屋大學出版會.
- 原 郎, 1971, 「1930年代の滿州經濟統制政策」, 滿州史研究會編, 『日本帝國主義下の滿洲』, お茶の水書房.
- 田中隆一, 2007, 『滿洲國と日本の帝國支配』, 有志社.
- _____, 2007, 『滿洲國と日本の帝國支配』, 有志舎.
- 淺野豊美, 松田利彦編, 2004, 『植民地帝國日本の法的構造』, 信山社.
- _____, 松田利彦編, 2004, 『植民地帝國日本の法的展開』, 信山社.
- 淺田喬二, 1991, 『日本帝國主義の滿洲支配』, 時潮社.
- 許壽童, 2002, 「日本の在滿朝鮮人教育政策1932-1937 : 間島の朝鮮人私立學校」 『一橋研究』第27권 제2호.

■ Abstract ■

Joseon-Manchukuo Summit Talk of 1936 in Tumen and “Seonman-ilyeo”

Joung, An-Ki

On October 29, 1936, Japanese Governor-General of Joseon Minami Jiro had a summit talk with Commander of the Kwantung Army Ueda Kenkichi in Tumen, Tonghwa Province, Manchukuo (Manchuria). In the summit talk, Minami Jiro shouted the slogan “Seonman-ilyeo (Korea and Manchuria are one body).” The main concern of Manchukuo was Joseon’s active cooperation for joint development of the Amnok River in connection with its five-year industrial development plan, while Joseon (Korea) was interested in Manchukuo’s political cooperation for ameliorating the conditions of Koreans in Manchuria as extra-territoriality was abolished in the puppet state. Consequently, the summit talk in Tumen was a political and economic big deal for exchanging the pending issues of Manchukuo’s urgent need for industrial development and Joseon’s quest for the stabilization of the Japanese rule over the Korean peninsula. So to speak, the meeting between two leaders in Tumen was a historical event through which the Joseon-Manchukuo relationship of antagonism and conflict was converted into that of mutual dependence and cooperation and in which the slogan of “Seonman-ilyeo” first appeared to represent such a new relationship. Further, the slogan did not end in an echo or gesture of empty words, but worked as an ideological mechanism that supported the Joseon-Manchukuo projects of the late 1930s including the water-power development on the Amnok River—that is, the construction of the Supung Dam—widely cited as “the landmark achievement of Seonman-ilyeo.” Ultimately, the slogan “Joseon and Manchukuo are one body” was another ideology for colonial rule that reconciled the ideological in-

compatibility between national unity advocated by Manchukuo and Naeseon-ilche (Japan and Korea are one entity) sought b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nd emphasized building a new imperial order. However, although previous studies referred to the slogan “Seonman-ilyeo” of the 1930s, most of them contained little discussion about when, where, why and by whom the slogan was shouted, or about the summit talk in Tumen. Therefore, this paper paid attention to the Tumen talk which marked a historical turning poi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seon and Manchukuo after the foundation of Manchukuo in 1932 and through which the leaders of Joseon and Manchukuo sought a new imperial order based on the slogan. In addition, this study tried to clarify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Tumen talk and slogan “Seonman-ilyeo” with focus on imperial Japan’s diverse responses to them.

Key words : Tumen talk, Joseon-Manchukuo summit talk, Seonman-ilyeo (Joseon and Manchukuo are one body), Naeseon-ilche (Japan and Joseon are one entity), National unity, Minami Jiro, Koreans in Manchuria